

상장사 · 중소기업의 투명회계 · 적법세금 · 성공경영 정보 —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공인회계사 조세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중기업
경영관리
외주화

2023/ 9/ 27 통권 1642 · 1643호

CEO·CFO·COO·회계책임자·조세전문가·재경실무자·총무담당자·모든 관리자용 **名品** 주간지

※ 추석 연휴로 인하여
1642·1643호 통합 발행되었습니다
풍성한 한가위 보내십시오

CEO 에세이 - 이해익원장
기러기 가족, 정신 차려라

자동차세 과세기준 개편 착수

CFO·회계실무자·조세전문가 정보

- 임직원의 지방출장비는 적격증빙 필수하여야 법인 비용으로 인정됨
- 국세고지 ARS 간편조회 서비스 시작
- 자동차세 과세기준 개편 착수한다
- 해외 가상자산 131조원, 국세청에 최초 신고
- 체납세액 정리 강화로 지자체 건전재정 확립 도모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금융위원회 의결·시행

·CMO·마케팅 Tax consulting 섹션

- 공동사업장이 상대방 지분승계로 단독사업장이 된 경우, 상시근로자가 감소하지 않으면 고용증대세액 공제 이월공제 가능함 (p.11)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計·經營戰略

〈법인의 각종 거래대금 · 소득지급시, 세금 원천징수와 소득지급명세서 제출〉

개념, 유형	관련 증빙, 원천징수, 과세증빙, 근거규정
사업자간 매입거래	매입전자세금계산서(과세거래)나 매입계산서(면세) : 원천징수 없음
근로소득 지급	종속적 고용에 대한 급여, 상여, 성과금 등 지급(간이세액표, 매월 원천징수 + 연말정산) + 4대보험 부담
일용근로소득	출근일수 별 일당지급: (하루 일당 - 소득공제 15만원) × 세율 6% × 45% × 1.1배
퇴직소득 지급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후 지급(원천징수), 퇴직연금 불입으로 대체(외부 금융사의 원천징수)
사업소득 지급	독립적 업무, 외주, 아웃소싱, 비정규직에 적용 : 총지급액 × 3.3% 원천징수, 매월 간이명세서
기타소득	일시원고, 강사료, 지식재산권대금 등, 총지급액 × 40% × 20% = 8.8%를 원천징수
금융지급이자	각종 금융회사, 은행, 저축은행, 중금사, 보험사, 증권사, 금융조합, 대부업자
비영업대금이자	지급액 × 25% × 1.1 = 27.5%를 원천징수, 다음달 10일 납부(지급명세서 제출)
일반회사채이자	비영업대금 아닌 회사발행채권이자, 투자신탁이익 등 14% × 1.1 = 15.4% 원천징수 납부(지급명세서)
배당소득지급	법인의 현금배당, 의제배당, 배당처분액에 15.4% 원천징수

(안세회계법인 대표이사 박윤종공인회계사작성)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 · 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

안전조세정보
02-829-7575

주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642 · 1643호 / 주간 39 · 40호

2023. 9. 27. (수)

·발 행 인:이윤선
·제 작:(주)안건조세정보
·대표전화:(02) 829-7575
FAX:(02) 718-8565

목 차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 02) 829 - 7575
팩스 : 02) 718 - 8565
- 부산·경남
전화 : 051) 642 - 3988
팩스 : 051) 642 - 3989
- 대구·경북
전화 : 053) 654 - 9761
팩스 : 053) 627 - 1630
- 대전·충청
전화 : 010) 3409 - 2427
팩스 : 042) 526 - 1686
- 수원·안산
전화 : 010) 5255 - 6116

-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 - 198993 - 13 - 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eAnSe.com의 차별화특장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법인의 각종 거래대금 · 소득지급시, 세금 원천징수와 소득지급명세서 제출	표지
C E O 에 세 이	기러기 가족, 정신차려라	2
세무·회계상담자문 (남들은 무슨 고민할까?)	- 회사 분리 - 비상장주식 무상증여 재원마련(중간배당) - 고철부산물(스크랩) 거래 시 대금지급관련 문의 - 전기차 가정용 충전기 회계 계정 처리 문의	4 5
눈에맞는 절세미인	임직원의 지방출장비는 적격증빙 입수하여야 법인비용으로 인정됨	6
매일 절세재무요점	- 지분율에 따라 달라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 국세청 홈택스 기업승계 세무컨설팅 주요 내용	8 9
직장인 Survival	퍼스널브랜딩 장점 12가지 ①	10
최 신 판 례 예 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 지주회사 설립·운영에 필요한 현금, 사무실 등 '지주회사 사업부문'과 관 련된 자산·부채를 승계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및 '자산·부 채의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사전법규법인-1165, 2022.12.13) -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연속으로 한 경우 로서 직전 임대료등 5% 범위 내 증액 시, 소득령\$155(20)(2)의 임대료 등 요건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법규재산-432, 2023.03.13)	11 12
세 정 뉴스와 해설	한도 초과한 월세액 세액공제 '10년간 이월 가능한 길 열린다	13
마 케 팅 Tax consulting	지주사 설립 관련 자산·부채승계시 독립된 분할 및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함	11
세 무 정 보	- 국세고지 ARS 간편조회 서비스 시작 - 자동차세 과세기준 개편 착수한다 - 해외 가상자산 131조원, 국세청에 최초 신고 - 체납세액 정리 강화로 지자체 건전재정 확립 도모	14 23 25 41
회 계 정 보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금융위원회 의결·시행	45
세 무 환 율 정 보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 환율	3

기러기 가족, 정신 차려라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외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길었던 코로나 시대가 종식되고, 좀 먹고 살 만해지니 다시 여행업이 번창한다. 중국도 예외가 아니다. 한 해에 중국에서 해외로 떠날 여행객은 웬만한 나라의 인구보다 많다. 이들이 해외에 부릴 돈만 수천억달러로 예상된다.

코로나를 이유로 여행 등을 금지했던 정책을 폐기한 이후 이민 시장 또한 폭증하고 있다. 중국 부유층의 해외 이탈이 가속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공동부유를 강조하는 시진핑 정부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녀들의 교육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첫번째다. 또 부자들과는 아무래도 엇박자인 사회주의체제를 벗어나고자 하는 갈증이기도 하다.

투자이민이나 장·단기 해외체류를 결행하는 가정 중에는 부정부패 고위관료들이 가장인 경우가 많다. 이들은 일찌감치 가족을 해외로 보내놓는다. 그런 후 남아 있다가 문제가 생기면 바로 내빼는 것이다.

이들을 지칭하는 말이 '튀관'(裸官)이다. 돈만 갖고 알몸으로 튀는 관료란 뜻이다. 한국어로 '기러기 탐관오리'쯤 된다.

요직에서 쏠쏠하게 콩고물을 뜯어먹다가 들통이 나자 거금을 갖고 곧바로 미국으로 도망한 사례가 여럿이다. 비행기에서 내려서는 마치 개선장군처럼 처자식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고 깊은 포옹을 나눴다고 한다. 한국의 범죄자들이 미국에 나타났다는 보도나 유비통신도 잇을 만하면 들리곤 한다. 미국은 그런 '쓰레기'들의 서식처로 안성맞춤인 모양이다.

또 중국은 튀관 말고도 광범위하게 조기유학에도 관심이 지대하다. 공식·비공식 유학상담이 판을 치고 있다. 광저우, 상하이, 베이징 같은 소득이 높은 지역일수록 매년 수만 명이 조기유학을 못가서 안달을 한다.

미국을 비롯해서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들은 중국의 초중고생들을 1명이라도 더 유치하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

중국 학생들은 바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들이기 때문이다. 이제 중국인들의 기러기가족 현상

은 돌이킬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 모두 돈독이 올라 눈알이 빨갛기 때문이다. 글로벌 학력이 곧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게 중국만의 풍습은 아니다. 한국에서도 오래된 풍경이다. 여기다 요즘 중국에서는 외국 국적을 얻으려는 특권층의 작태가 거의 신드롬 수준이다.

외국 국적을 성공의 훈장처럼 여긴다. 지도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아예 실종됐다. 이래가 지고서는 동반성장하자는 명분은 공허해진다.

한국에서도 끓이지 않고 줄기차게 들리는 게 유명인사며 고위공직자들의 위장전입, 이중국적이다.

중국의 기러기가족 현상에는 노무자들의 해외진출도 한 몫 차지한다. 조선족들의 경우다. 애들이 조기유학을 떠나는 대신 부모가 취업하러 떠난다.

그래서 기러기가족이 되기는 마찬가지다. '가족붕괴' 후 돈이 무슨 소용인지 답답할 뿐이다.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9월 15일 (금)	9월 18일 (월)	9월 19일 (화)	9월 20일 (수)	9월 21일 (목)
미	달	러	(USD)	1326.10	1327.60	1326.00	1323.70	1329.30
일	본	엔	(JPY)	899.08	897.91	898.34	896.18	896.45
영	국	파	운 드	(GBP)	1645.29	1645.16	1642.25	1639.43
캐	나	다	달 러	(CAD)	981.24	981.59	983.13	984.35
홍	콩	달	러	(HKD)	169.40	169.62	169.60	169.27
중	국	원	(CNH)	182.26	182.58	182.06	181.28	181.86
유	로	화	(EUR)	1410.84	1415.75	1417.76	1414.11	1415.97
호	주	달	러	(AUD)	853.81	854.38	853.68	854.91
싱	가	폴	달 러	(SGD)	972.46	973.78	972.53	970.06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283.23	283.43	282.79	281.88
							281.88	283.71

회사 분리

Q 현재 우리 회사를 분리 하려고 합니다. Agreement를 통해서 급여 지급을 기존의 A회사에서 모두 하고, 임금 및 이에 따른 Supporting 비용을 B 회사에 청구 해서 받을 예정입니다.

이때, 급여 처리를 위한 External supplier에게 세금계산서를 받을 예정이며 금액은 분리가 가능합니다 (A 와 B에 대한 각각의 정산 가능)

1. 이런 상황에서, B 회사의 임금과 External supplier의 청구 금액 및, 현 회사가 제공하는 용역 대금을 어떻게 정산하면 되나요?
2. 임금은 인보이스
나머지 External supplier 금액은 A 회사에서 지원하는 비용을 세금계산서 끊으려고 할 때, 4대 보험 등에 문제가 있나요?
3. 기존 회사에서 분사후, 분사된 직원들에 대한 급여와 4대 보험을 납부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지?
4. 사업자 등록증에 임금 용역 같은 서비스에 대한 내용은 없어도 관계 없나요?

A 1. 회사 분리에 따라 기존회사에서 급여 지급하고 분리된 회사에 청구하는 거래 등의 대금 정산 방법 등은 세무회계 사항이 아니고, 당사자간의 인사계약에 따라 진행하는 것입니다.
2. 다만, 회사가 분리됐으므로 법률적으로 B소속 직원인데 A가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등 여러 측면에서(노무, 세무 등)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무상증여 재원마련(중간배당)

Q 12월 결산법인이며, 정관상 중간배당 기준일은 7월 1일 0시 현재의 주주입니다.
금번 당사의 주주 한명의 비상장주식 전부를 미성년자녀에게 무상증여하려고 하며 그 재원마련을 아래와 같이 할경우 상법상 문제될 여지는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23년 4월 경 : 2022년 결산귀속 정기배당은 하지 않음
2. 2023년 5월 경 : 미성년자녀에게 비상장주식 무상이전
3. 2023년 7월 경 : 중간배당 실시(중간배당 재원 유무 확인 후)
4. 2023년 8월 경 : 수증자인 미성년자녀의 중간배당금으로 증여세 납부

A 상법상 중간배당은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가능하고 이사회결의를 통해 진행하면 문제되지 않으므로, 귀사의 경우도 정관에 중간배당 규정이 있고 상법상 중간배당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있다면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고철부산물(스크랩) 거래 시 대금지급관련 문의

Q 당사는 A사로부터 고철부산물을 매입하기로 하였습니다.
매입한 고철부산물에 대해 스크랩전용계좌를 통해 대금을 지급해야하는데,
당사가 A로부터 받을 대금이 있어 받을대금과 스크랩매입금액을 상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고철부산물의 매입대금은 스크랩계좌로 지급이 되지않는데,
스크랩계좌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나요?

A 스크랩거래의 경우 전용계좌를 이용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귀사의 경우도 스크랩계좌로 대금을 지급하고 받을 대금은 별도의 계좌로 받으셔야 가산세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전기차 가정용 충전기 회계 계정 처리 문의

Q 당사에서 자율주행 관련 개발을 위해 아이오닉5 (전기차량)을 리스 중입니다. 차량 충전을 위한 가정용 충전기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해당 비용을 소모품비와 차량유지비 중 어떤 계정으로 처리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A 계정과목은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귀사의 거래 행위에 맞는 타당한 계정을 선택하여 적용하시면 되는데,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품목은 자산으로 반영하여야 하므로 충전기에 대해 소모품비(비용)나 차량유지비(비용)가 아닌 비품(자산)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임직원의 지방출장비는 적격증빙 입수하여야 법인비용으로 인정됨

상담실 백종훈 차장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되어 해외출장이나 지방출장을 가서 지출하는 버스요금 · 택시요금 · 기차요금 · 항공료 등의 교통비와 출장지에서의 식대 · 숙박비 등은 여비교통비 계정에 반영하여 법인이 비용으로 처리함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출장관련 비용을 여비교통비가 아닌 출장업무를 수행한 해당 임직원의 실비변상적 급여에 포함시켜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하기도 하는데, 각각의 세무회계처리 방법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출장관련 비용을 여비교통비로 반영하여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함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 중 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계산서 · 세금계산서 · 신용카드전표 · 현금영수증 등의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므로, 회사의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출장비를 ‘여비교통비’라는 계정에 반영하여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반드시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증빙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한다.

물론 법정증빙영수증을 수취하지 못했어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는 있지만 지출증빙불비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회사의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따라서 출장기간 동안 교통비 · 숙박비 · 식대 등에 지출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법정증빙영수증을 수취하는 것이 정상적인 법인의 비용으로 반영하면서 불이익도 없애는 방법이다.

♣ 법인46012-3088, 1996.11.6

법인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당해 법인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하여 사용처별로 거래증빙과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야만 손금산입 가능하며, 증빙서류의 첨부가 불가능한 경우는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과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지급은 손비로 인정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회사의 규모, 출장목적, 업무수행 여부 및 정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출장비를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처리해도 됨

출장비를 법인의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는 방법 이외에도 해당 임직원의 실비변상적 급여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는 사내의 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실비변상정도의 출장비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따라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장비를 해당 임직원의 비과세 소득에 반영하여 처리하면 되는 것이다.

물론 임직원에게 지급한 출장비 전액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출장지·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사내의 여비지급규정에 의해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내에서만 비과세가 인정되며, 이를 초과하는 과다한 출장비는 해당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❶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 법인46013-2370, 1998.8.22

회사의 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출장비는 출장목적·출장지·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규정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는 것임

또한 비과세 대상인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을 매월 지급받고 있는 경우라도 시외출장에 따른 출장비를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해당 출장비가 실제 소요된 비용을 충당하는 정도의 금액이라면 역시 비과세가 적용된다.

♣ 서일-1016, 2005.08.29

비과세대상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종업원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이용하여 시외출장에 사용하거나 시외출장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동 출장에 실제 소요된 유류비·통행료 등과 교통비를 사용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 중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하는 것임.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월

지분율에 따라 달라지는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법인의 구분	지분율 및 시가총액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2020. 3. 31. 이전 양도분까지	1% 이상 또는 15억원 이상
	2020. 4. 1. 이후 양도분부터	1%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장외거래되는 벤처기업	2020. 3. 31. 이전 양도분까지	2% 이상 또는 15억원 이상
	2020. 4. 1. 이후 양도분부터	2%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2020. 3. 31. 이전 양도분까지	4%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
	2020. 4. 1. 이후 양도분부터	

화

자동차세 과세표준 및 세율

	비영업용		영업용	
승용자동차	1000cc 이하	80원	1000cc 이하	18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이하	19원
	1600cc 초과	200원	1600cc 초과	24원
그 밖의 승용자동차 (전기차 등)	10만원		2만원	



국세청 홈택스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주요 내용

가업승계 사전 · 사후요건 진단	가업승계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 개별기업이 사전에 준비해야 할 내용과 사후에 지켜야 할 내용을 진단하고 보완사항을 안내합니다
상시 자문서비스 제공	가업승계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어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검토하여 4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합니다.
신속한 서면답변	가업승계와 관련하여 법령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 서면질의를 제출하면 최우선으로 처리합니다.



ETF별 적용되는 세금

시점	세금 종류	국내 주식형 ETF	기타 ETF
분배금 수령 시	배당소득세	분배금*15.4%	분배금과 과표기준가격 증가분 중 작은 금액*15.4%
ETF를 매도해 차익 발생 시		없음	투자한 기간 동안의 매매차익과 과표기준가 증가분 중 작은 금액*15.4%
ETF 매도시	증권거래세	없음	없음



퍼스널브랜딩장점 12가지 ①

신뢰성과 신뢰 구축

퍼스널브랜딩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신뢰성과 신뢰의 구축입니다. 지속적으로 가치를 제공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자신을 소개하면 사람들은 귀하의 의견과 권장 사항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기회 창출

잘 만들어진 개인 브랜드는 당신이 상상하지 못했던 기회의 문을 열어줍니다. 이는 채용 제안, 파트너십, 연설 참여 및 협업을 유도합니다. 귀하의 고유한 브랜드는 경쟁이 치열한 취업 시장에서 귀하를 차별화할 수 있습니다.

경쟁 시장에서의 차별화

많은 산업이 과포화되어 있는 세상에서 퍼스널브랜딩은 귀하를 돋보이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귀하의 고유한 자질을 강조하여 잠재적인 고용주나 고객이 다른 사람보다 귀하를 더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향상된 네트워킹

퍼스널브랜딩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구축하도록 장려합니다. 지식과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귀하의 목표와 포부를 지지할 수 있는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향상된 온라인 존재

오늘날의 디지털 환경에서는 온라인 존재가 매우 중요합니다. 퍼스널브랜딩은 귀하의 온라인 활동이 전문적일 뿐만 아니라 매력적이고 유익하다는 것을 보장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팔로어, 구독자 및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영향력 증가

강력한 개인 브랜드는 업계에서 영향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가치 있는 콘텐츠와 통찰력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면 사고 리더가 되고 귀하의 의견이 중요해집니다.

최 신 판 례 예 규

Marketing Tax consulting

지주사 설립 관련 자산·부채승계시
독립된 분할 및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함

지주회사 설립·운영에 필요한 현금, 사무실 등
‘지주회사 사업부문’과 관련된 자산·부채를 승
계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및 ‘자
산·부채의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사전법규법인-1165, 2022.12.13

■ 질 의

- 내국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함께 지주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현금, 사무실, 이관되는 인원에 관한 자산·부채 등을 승계하는 경우,
- 법인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적격분할 요건 중 제46조 제2항 제호 가목 및 나목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요건 및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회 신

내국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할 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지주회사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현금, 사무실, 미수금 등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과 관련된 자산·부채를 승계하는 경우 적격분할 요건 중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및 같은 호 나목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며, 분할신설법인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과 관련된 자산·부채를 승계하였는지 여부는 분할신설법인의 사업내용, 자산·부채의 사용 현황, 운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법 제118조의9에 따라 국외전출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같은 법 제118조의 16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은 후에 양도소득세액을 증액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수정신고 증액분도 납부유예 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국제조세제도과-30, 2023.01.19

■ 질 의

- 거주자 A는 '17.12.31. 현재 비상장법인(주)의 지분 XX.XX%를 소유하고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는 자로,
• '18.xx.xx. 미국으로 출국하여 비거주자로 전환됨에 따라 소득세법 제118조의9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및 소득세법 제118조의16에 따른 납부유예를 신청하여 '18.xx.xx. 허가 받았음
• 최초 양도소득세 신고 시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19.xx.xx. 수정신고 및 증액된 세액에 대하여 추가 납부유예를 신청하였음

질의

- 국외전출자가 최초 양도소득세 신고분에 대해 소득세법 제118조의16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납부유예를 허가받은 후 수정신고로 인해 증가한 납부세액이 추가 납부유예 대상에 포함되는지

■ 회 신

소득세법 제118조의9에 따라 국외전출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같은 법 제118조의 16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은 후에 양도소득세액을 증액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수정신고 증액분도 같은 법 제118조의 16에 따른 납부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연속으로 한 경우로서 직전 임대료등 5% 범위 내 증액 시, 소득령 155<20>(2)의 임대료등 요건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법규재산-432, 2023.03.13

■ 질 의

- 임대차기간을 1년 단위로 임차인과 계약한 경우로서 직전 임대차계약 개시일부터 1년이 지난 날을 새로운 임대차기간 개시일로 하고 직전 임대료등 대비 5% 이내로 증액하여 계약한 경우
- 소득령 155<20>(2), 소득령 167의3①(2)마목, 조특령 97의3③(1)에 따른 임대료등 증액제한 요건을 충족한 것인지

■ 회 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택임대차보호법」제4조제1항단서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연속으로 한 경우로서 직전 임대차계약 개시일부터 1년이 지난 날을 새로운 임대차계약 개시일로 하여 직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임대료등")의 5% 범위 내에서 증액한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제2호 전단, 같은 영 제167조의3제1항제2호마목 본문, 「조

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제3항제1호 전단의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주류제조자가 주류를 제조하여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경우「주류의 반출·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제3항에 따라 반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같은 고시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주류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는 주류 외의 리큐르주를 주류소매업자에게 반출할 수는 없는 것임

사전법규부가-959, 2023.03.27

■ 질 의

- 주류제조자가 리큐르주를 제조하여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경우 전문소매업자 및 의제소매업자에게 반출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주류제조자가 주류를 제조하여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경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위임받아 고시한 「주류의 반출·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제3항에 따라 반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같은 고시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주류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는 주류 외의 리큐르주를 주류소매업자에게 반출할 수는 없는 것임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한도 초과한 월세액 세액공제 '10년 간 이월' 가능한 길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19일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한 월세액 공제 혜택 확대를 위해 무주택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액 초과분에 대해 10년간 이월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은 무주택자가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해당 공제액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이하 '공제기준근로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공제하지 않고 있다.

정태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월세액 세액공제액 초과분에 대하여 10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한 월세액 공제 혜택을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정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무주택세대주의 범위를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인 경우로 정하고 있다.

또한 월세액 소득공제 대상자가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월세액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750만원으로 정하고 그 금액의 15%를 세액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특법 개정안은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소득 기준을 총급여액 9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8천만원 이하로 완화하는 한편, 월세액 한도를 75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상향하도록 하고 있다.

정 의원은 "상대적으로 소득 대비 월세액 부담이 큰 저소득 무주택자는 공제 혜택을 일부만 받게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함과 동시에, 월세액 세액공제 자격을 완화하고 공제 한도를 상향해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한다"고 밝혔다.

전화 한 통으로 내가 낼 국세 확인... 총 26종 조회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18일부터 전화 한 통에 내가 낼 국세가 얼마인지 확인하는 '국세고지 ARS 간편조회' 서비스를 개시한다.

지역번호 없이 1544-9944로 연락하면,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 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종합부동산세 등 총 26종의 국세고지서를 조회할 수 있다.

조회대상은 국세청이 결정한 고지세액이다. 납세자가 자진 신고한 세액은 홈택스나 손택스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납부할 세금 외에도 국세 체납액도 확인할 수 있으며, 자신의 핸드폰 문자로 가상계좌번호를 전달받아 인터넷 뱅킹은행 등으로 관련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

기존의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부가가치세 신고(무실적자), 종합소득세 신고(단순경비율 모두채움) 외 국세고지 내역도 1544-9944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예금자보호한도 이번에도 5천만원 묶이나... 이달 TF 최종회의

2001년 이후 23년째 '1인당 5천만원'에 묶인 국내 예금자보호한도가 이번에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란 전망이 대세다. 최근 2금융권 건전성 불안 등이 돌출한 상황에서 예금자보호한도를 높일 경우 급격한 자금 쏠림이나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19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 예금자보호제도 손질을 위해 운영해온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관련 최종 회의를 연다.

TF 연구 용역 결과를 공유하고 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 TF 연구 용역을 담당한 민간 전문가, 은행·저축은행·보험 등 업권별 관계자들이 모두 모인다.

TF 연구 용역 보고서에는 예금자보호한도와 관련해 ▲ 보호한도 5천만원으로 현행 유지 ▲ 단계적 한도 상향(예: 7천만→1억원) ▲ 일부 예금 별도 한도 적용 등의 시나리오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정부는 '현행 유지' 쪽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2금융권 불안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선불리 한도를 높였다가 시스템 리스크로 변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금융권 예보로 인상 부담이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는 점, 물가 인상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고지 ARS 간편조회 서비스 시작

- 국세청, 2023. 9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고령층,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국세 납부 편의를 위해 「국세고지 ARS 간편조회」 서비스를 9. 18.(월)부터 시행합니다.
 - 지역번호 없이 1544-9944로 전화하여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국세고지 메뉴를 선택하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종합부동산세 등 총 26종의 국세고지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고지세액뿐만 아니라 국세 체납액도 조회가 가능하며, 본인의 핸드폰 문자로 가상계좌번호를 수신 받아 인터넷뱅킹·은행 등을 통해 관련 국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절차] ① ARS 전화 → ② 본인인증 → ③ 국세고지 열람 → ④ 가상계좌 문자 수신 및 납부

- 이번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는 기존의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부가가치세 신고(무실적자), 종합소득세 신고(단순경비율 모두채움) 외에 국세고지 내역도 ARS (☎.1544-9944)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세고지 ARS 간편조회」 서비스는 국세청이 결정하여 고지한 세액만 조회 가능하며, 납세자가 자진 신고한 납부할 세액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 [홈택스]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손택스]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앞으로도 국세청은 디지털 취약계층이 편리하게 국세행정 업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1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에게 국세 납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추진 배경) 우리나라는 '17년 고령사회 진입 이후 고령인구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납세자도 60대 이상 고령층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 [고령인구 비중] '17년 14% (고령사회) → '23년 18% → '25년 20% (초고령사회) <통계청, 65세 기준>

- 최근 5년간 고지자료 분석 결과 40대 이하 젊은 층 납세자는 감소 추세이고, 50대는 소폭 감소하며 60대 이상 고령층 납세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 일부 고령 납세자들은 홈택스 등 디지털 국세행정에 어려움을 느껴 국세 납부를 위해 세무서와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등 불편함이 있습니다.

□ (추진 내용) 국세청은 고령층 납세자도 전화로 국세고지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국세고지 ARS 간편조회」 서비스를 9. 18.(월)부터 시행합니다.

- ARS 전화(☎.1544-9944)로 통화 연결한 후에 간단한 본인인증을 거쳐 납부할 고지세액이나 체납액을 조회하고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개인 납세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종합부동산세 등 총 26종의 국세고지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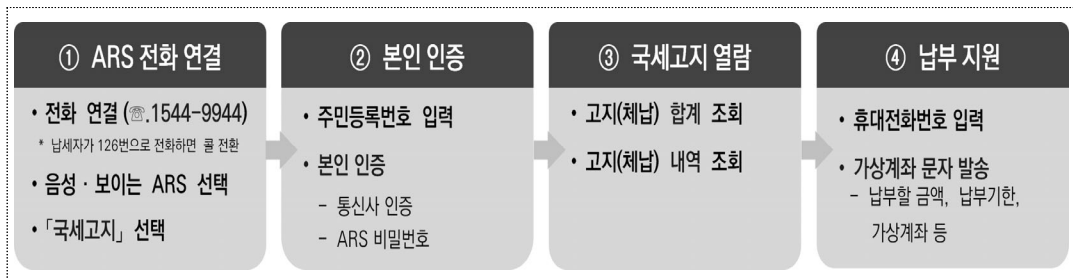
| 서비스 안내 |

구 분	안 내 사 항
서비스 대상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제외)
조회 대상	국세고지서 26종 (최근 5년간 결정된 고지서의 세목코드 기준)
조회 내용	납부할 고지세액이나 체납액 및 그 내역

2 전화 한 통으로 납부할 국세고지를 간편하게 조회해 보세요

□ (이용 방법) 「국세고지 ARS 간편조회」 이용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서비스 흐름 |



- ① 먼저 ARS 전화(☎.1544-9944)로 통화 연결하고 이용방식(보이는/음성 ARS)을 고른 후에 '국세고지 메뉴'를 선택합니다.
- ②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납부할 국세의 유무를 확인하게 되며 납부할 국세가 있는 경우에만 본인인증을 거쳐 고지내역을 열람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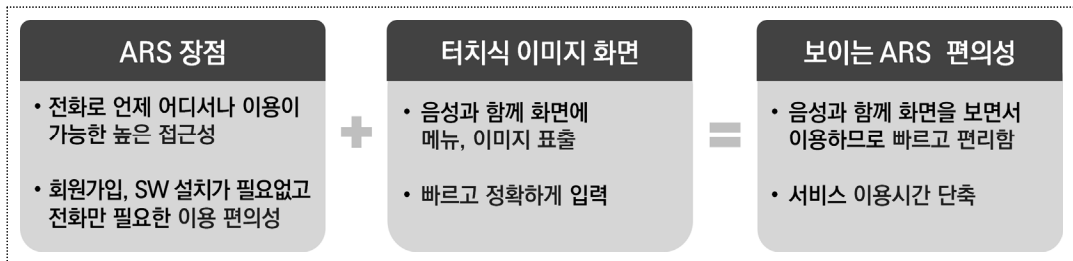
- ③ 열람자료는 조회 시점의 납부할 고지세액이나 체납액에 대한 총계와 내역이며, 납세자는 고지내역을 건별로 상세 조회할 수 있습니다.
- ④ 고지내역 열람 중 '가상계좌 문자 수신' 버튼을 누르면 입력한 휴대전화번호로 가상계좌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신받은 문자 메시지의 가상계좌를 활용하여 자주 이용하는 은행이나 인터넷뱅킹에서 가상계좌 또는 국세계좌(전자납부번호)로 납부하면 됩니다.

| 본인인증 방법 |

구분	내 용
통신사 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징) 이동통신사(SKT, KT, LGU+) 휴대폰 및 알뜰폰 지원 • (절차) 주민등록번호 입력 → 휴대전화번호 입력 → 통신사 선택 → 인증번호 입력
ARS 비밀번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징) 6자리 숫자 ⇒ '123456', '987654' 등 연속 숫자 불가 • (절차) 통신사 인증 → 비밀번호 등록 ⇒ 최초 등록 시, 3회 이상 오류로 재등록 시

- (보이는 ARS 이용) 청각 장애인 등은 화면을 보면서 메뉴를 터치하는 보이는 ARS를 사용하여 빠르고 정확하게 국세고지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보이는 ARS 편의성 |



- 보이는 ARS가 화면에 나타나지 않을 경우 스마트폰 종류별로 필요한 앱을 설치하고 전화통화를 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안드로이드 폰 사용자는 손택스 앱이나 은행·보험 등 금융 앱, 콜게이트 앱을 설치하고, iOS 폰 사용자는 손택스 앱을 설치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용 일시) 국세고지 조회는 365일 상시 이용이 가능하며, 이용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입니다.
- 이번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는 기존의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부가가치세 신고(무실적자), 종합소득세 신고(단순경비율 모두채움) 외에 국세고지 내역도 ARS(☎1544-9944)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ARS(☎.1544-9944) 서비스 종류 및 일정 |

서비스 종류	국세고지 조회	장려금 신청	종합소득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제공 시기	상시	3월, 5월, 9월	5월	1월, 7월

- ☐ (서비스 홍보) 국세청 홈페이지·유튜브·블로그 등에 동영상, 카드뉴스 등으로 「국세고지 ARS 간편조회」 이용 방법을 게시할 예정이며
- 국세상담센터(☎.126)로 문의하면 사용방법을 자세하게 알려 드립니다.
- ☐ 앞으로도 국세청은 디지털 취약계층이 전화 한 통으로 편리하게 국세행정 업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참고 1 - 「국세고지 ARS 간편조회」 서비스 흐름도

I. 서비스 선택

- ① ARS 전화 (☎.1544-9944)
- ① 1544-9944로 전화 연결하고 「보이는 ARS」 선택
- ② 국세고지 메뉴 선택
- ③ 주민등록번호 입력

II. 본인인증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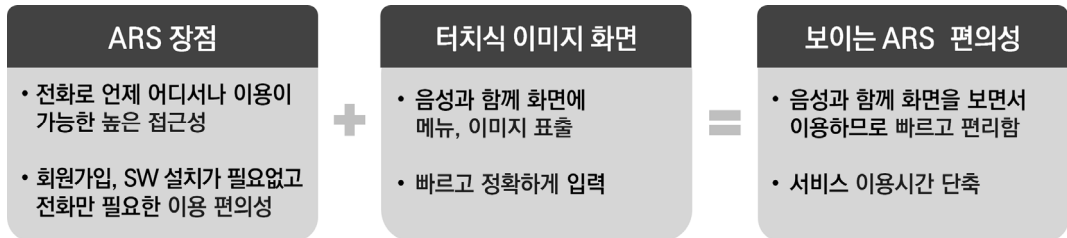
- ④-1 휴대폰 인증
- ☞ ①정보제공 동의 ②휴대전화번호 입력 ③통신사 선택 ④인증번호 입력
- ④-2-1 ARS비밀번호 등록
- ☞ ①ARS비밀번호 등록 선택 ②비밀번호 입력 ③비밀번호 확인
- ④-2-2 ARS비밀번호 인증

III. 고지내역 조회 및 납부

- ⑤ 국세고지(체납 포함) 총 건수·금액 및 상세 내역 조회
- ⑥ 국세고지 화면에서 '가상계좌 문자 수신(3번)' 클릭 → 가상계좌 문자 모바일 수신
- ⑦ 은행·인터넷뱅킹·ATM기기 등에서 가상계좌나 국세계좌를 활용하여 납부



참고 2 - 「국세고지 ARS 간편조회」의 편리성



- 높은 접근성 : 전화로 언제 어디서나 이용이 가능함
 - 이용 편의성 : 회원가입, SW 설치가 필요없음
 - 터치식 이미지 화면 : 음성과 함께 화면에 메뉴, 이미지를 표출, 빠르고 정확하게 입력 가능
- ⇒ 화면을 보면서 이용하므로 빠르고 편리하며 이용시간 단축

참고 3 - 「국세고지 ARS 간편조회」 관련 주요 문답(FAQ)

1. 완납한 국세고지 내역도 조회할 수 있습니까?

- 완납한 자료는 조회할 수 없습니다. 납세자가 조회하는 시점에 미납된 고지세액이나 체납액이 있는 국세고지 내역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2. 개인 납세자만 이용할 수 있고 법인 납세자는 이용할 수 있습니까?

- 과세자료 보호를 위해 휴대폰 인증이 필요하므로 개인 납세자(개인사업자 포함)만 이용할 수 있으며, 법인 납세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종합부동산세 등 26종의 국세고지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서비스 이용 시기와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365일 상시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입니다.

4. ARS비밀번호 등록은 어떻게 합니까?

- 현재는 납부할 국세고지가 있어야만 ARS비밀번호 등록 메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는 별도 메뉴를 만들어 언제든지 등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ARS비밀번호 등록 메뉴 → 휴대폰 인증 → 비밀번호(6자리) 입력 및 확인

5. 보이는 ARS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 스마트폰 종류별로 보이는 ARS 구동용 앱을 설치한 후 이용해 보십시오.

폰 종류	안드로이드 폰 (삼성 갤럭시 등)	iOS 폰 (애플 아이폰)
설치 앱	손택스 앱, 금융 앱, 콜게이트 앱	손택스 앱

6. 126번(국세상담센터)으로 전화해도 국세고지 ARS 간편조회를 이용할 수 있나요?

- 126번에서는 국세고지 ARS 간편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다만, “국세고지 메뉴”를 클릭하면 1544-9944번으로 콜 전환이 되므로, 1544-9944에서 국세고지 ARS 간편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참고 4 - 「국세고지 ARS 간편조회」로 조회 가능한 국세고지서 목록

□ 총 26종 국세고지서 (최근 5년간 결의된 고지서의 세목코드 기준)

No.	세목명	No.	세목명
1	부가가치세 (정기, 예정고지, 수시 등)	14	기타소득세
2	종합소득세 (정기, 중간예납, 수시 등)	15	자녀장려금
3	종합부동산세	16	법인세
4	근로소득세(갑)	17	과태료
5	사업소득세	18	이자소득세
6	양도소득세 (확정, 예정고지, 수시)	19	교육세(금융)
7	증여세	20	교통·에너지·환경세
8	퇴직소득세	21	주세
9	증권거래세	22	인지세
10	개별소비세	23	배당소득액
11	상속세	24	징계부가금
12	근로장려금	25	연금소득세
13	기타경상이전수입	26	교육비(보험)



참고 5 - 국세고지 및 납부 현황

□ 국세고지 연령별 비중 현황 (최근 5년)

- [60대 이상 납세자] 지속 증가 추세 ('18년 23% → '22년 30%, 7%p ↑)
- [50대 납세자] 소폭 감소 ('18년 33% → '22년 31%, 2%p ↓)
- [40대 이하 납세자] 지속 감소 추세 ('18년 44% → '22년 38%, 6%p ↓)

<최근 5년간 납세자의 연령별 비중 변화>

[단위: 천 건]

연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전체 건수	8,936	8,999	7,018	6,616	9,695
60대 이상	2,078 23%	2,216 25%	1,979 28%	1,936 29%	2,957 30%
50대	2,906 33%	2,912 32%	2,184 31%	2,060 31%	3,043 31%
40대 이하	3,952 44%	3,871 43%	2,855 41%	2,620 40%	3,696 38%

□ 연령별 납부 현황 ('22년)

- [70대] 인터넷뱅킹(38%), 은행(38%) 납부 선호
- [60대] 인터넷뱅킹(58%), 은행(17%) 납부 선호
- [50대] 인터넷뱅킹(63%), 신용카드 등(23%) 납부 선호
- [40대 이하] 인터넷뱅킹(61%), 신용카드 등(30%) 납부 선호

<'22년 연령별 납부방법 비중>

구분	인터넷뱅킹	은행	ATM	신용카드 등*
70대	38%	38%	14%	10%
60대	58%	17%	8%	17%
50대	63%	11%	3%	23%
40대 이하	61%	7%	2%	30%

* 신용카드, 홈택스 납부, 지로 납부

참고 6 - 세무서 방문 인원 현황

□ 최근 5년간 세무서 방문인원 현황

- 세무서 방문인원은 감소 추세 ('18년 12% → '22년 2%, 10%p ↓)

<최근 5년간 세무서 방문 인원 현황>

[단위: 만 건]

연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전체민원 건수	5,157	7,477	11,812	13,777	19,646
방문민원 건수	612 12%	631 8%	722 6%	542 4%	450 2%

□ 연령별 세무서 방문인원 현황

- 40대 이하 내방객 방문은 감소 추세 ('18년 43% → '22년 34%, 9%p ↓)
- 50대 내방객 방문은 소폭 감소 ('18년 32% → '22년 30%, 2%p ↓)
- 60대 이상 내방객 방문은 증가 추세 ('18년 25% → '22년 36%, 11%p ↑)

* 60대 이상 내방객의 주요 민원요청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납세증명서(기타용), 폐업사실 증명, 소득금액증명,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 등임

<최근 5년간 연령별 세무서 방문 인원 현황>

[단위: 만 건]

연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합계	612	631	722	542	450
40대 이하	261 43%	255 40%	261 36%	193 36%	153 34%
50대	199 32%	203 32%	235 33%	164 30%	133 30%
60대 이상	152 25%	174 27%	226 31%	185 34%	163 36%

출산을 저하, 고령화 등에 따라 60대 이상 내방객 비중 증가



참고 7 - 국세 납부방법 안내

구 분	주 요 내 용
금융기관 (수납창구, CD/ATM, 인터넷뱅킹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납창구) 현금,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 (CD/ATM) 계좌이체, 신용카드(분할납부불가), 가상계좌 납부 ◦ (ARS)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 (공과금수납기)* 계좌이체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기관에서 공과금 납부 전용을 위해 설치된 단말기 ◦ 납부시간: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홈택스 (PC, 모바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 홈택스 납부(공동·금융인증서 접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근경로)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국세청 손택스 납부(공동·금융인증서 접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근경로)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 ◦ 페이코, 앱카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이용자는 간편결제로 납부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개 카드사(KB국민·NH·롯데·삼성·신한·현대) ◦ 납부시간: 07:00 ~ 23:30*(연중 무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00 이후 납부한 경우 납부결과는 다음날 07시부터 확인 가능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결제원 사이트 납부(www.giro.or.kr, www.cardrotax.kr) ◦ 공동·금융인증서로 접속 후 기본정보(납세자 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를 조회 또는 입력한 후 납부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 납부시간: 00:30 ~ 23:30(연중 무휴)
세무서 (무인수납 창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인수납창구)* 신용카드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카드수납기로 납세자가 직접 이용

자동차세 과세기준 개편 착수한다

- 행정안전부, 2023. 9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 9.21.(목) 현재 배기량 크기에 따라 과세되는 승용차 자동차세 과세 기준을 변경하기 위한 개편 작업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 현재 비영업 승용차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는 배기량(1cc)당 1,000cc 이하는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를 초과하면 200원을 부과, 영업 승용차는 배기량(1cc)당 1,600cc 이하는 18원, 2,500cc 이하는 19원, 2,500cc를 초과하면 24원을 부과하고 있다.
 - 최근 자동차 배기량 크기는 줄이되 출력은 그대로 유지하는 자동차 엔진 다운사이징(Downsizing) 기술의 발달로 기존 고배기량의 고가차량이 저배기량으로 바뀌게 됨에 따라 자동차세 과세기준 변경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 이에 대통령실은 제4차 「국민참여토론」을 개최하여(' 23.8.1.~21.)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권고안을 마련, 관계부처에 통보했다(9.13.).
 - 행정안전부는 대통령실이 국민참여토론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 만큼 개편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상기 권고안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 행정안전부는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자동차세 개편 추진단」을 구성하고, 전문가, 관계부처 등으로부터 개편 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을 충분히 수렴해서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행정안전부는 개편안 마련 후 국내외 이해관계자산업계 의견수렴, 공청회 등을 거쳐 2024년 하반기 입법을 목표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동차세 과세 기준 개편 필요성에 많은 국민께서 공감하고 있는 만큼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공평 과세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개편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참 고

자동차세 개요

□ 개요

- (개념)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재산세적 성격 및 도로 손상, 교통혼잡 유발 등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원인자부담적 성격의 조세
- (세수 귀속) 특광역시세 및 시·군세

□ 과세 대상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
* 덤프·콘크리트믹서트럭

□ 납세의무자

- 자치단체 내 등록·신고된 자동차의 소유자(등록원부상 소유자)

□ 과세표준 및 세율

- 차종(승용, 승합, 화물 등)과 용도(영업용, 비영업용)에 따라 과세

① 승용자동차 : 배기량(cc) 기준 차등과세

비영업용		영업용	
1,000cc 이하	cc당 80원	1,600cc 이하	cc당 18원
1,600cc 이하	cc당 140원	2,500cc 이하	cc당 19원
1,600cc 초과	cc당 200원	2,500cc 초과	cc당 24원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3년차부터 연 5%씩, 최대 50%까지 세액 경감

(예) 1998cc 쏘나타 2015년식(상반기등록) → ('21년) 年세액 299,700원(=1998×200×75%)

② 그 밖의 승용자동차(전기차 등)

해외 가상자산 131조원, 국세청에 최초 신고

— 국세청, 2023. 9

- (신고 결과)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실적은 총 5,419명, 186.4조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하여 신고인원(1,495명, 38.1%↑)과 신고금액(122.4조 원, 191.3%↑)이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시행된 '11년 이후 최대 실적입니다.

【 '23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실적 】

(명, 조 원)

구 분	예적금	주식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기타	가상자산	총신고
'23 신고인원 (금액)	2,942 (22.9)	1,590 (23.4)	251 (5.2)	100 (2.1)	593 (2.0)	1,432 (130.8)	5,419 (186.4)
'22 신고인원 (금액)	2,489 (22.3)	1,692 (35.0)	208 (3.5)	81 (1.4)	512 (1.8)	- (-)	3,924 (64.0)

- 올해부터 신고대상에 포함된 가상자산계좌는 첫 신고임에도 불구하고 개인·법인 신고자 1,432명이 130.8조 원을 신고하면서 전체 신고자산 중 가장 많은 금액(전체 신고금액 대비 70.2%)이 신고되었습니다.
- 가상자산계좌 이외 예적금계좌, 주식계좌 등 해외금융계좌의 경우 55.6조 원이 신고 되었는 데 전년 대비 8.4조 원(13.1%↓)이 감소하였습니다.
- 올해 신고인원과 신고금액이 최대 실적을 기록한 이유는 해외 가상자산계좌가 최초로 신고대상에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 (향후 계획)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 등을 활용하여 해외금융계좌 미 신고 혐의자를 철저히 검증하여 과태료 부과, 통고처분, 형사고발, 명단공개 및 관련 세금 추징 등을 엄정히 집행할 예정입니다.
- 수정·기한 후 신고자는 최대 90%까지 과태료 감경이 가능하고, 특히 국세청을 포함한 전 세계 과세당국이 도입을 추진 중인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정보교환 보고 규정(CARF*)에 따라 정보교환을 준비 중이니 신고대상자는 해외 가상자산계좌도 조속히 수정·기한 후 신고를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암호화 자산 보고 규정(Crypto Asset Reporting Framework)



I

2023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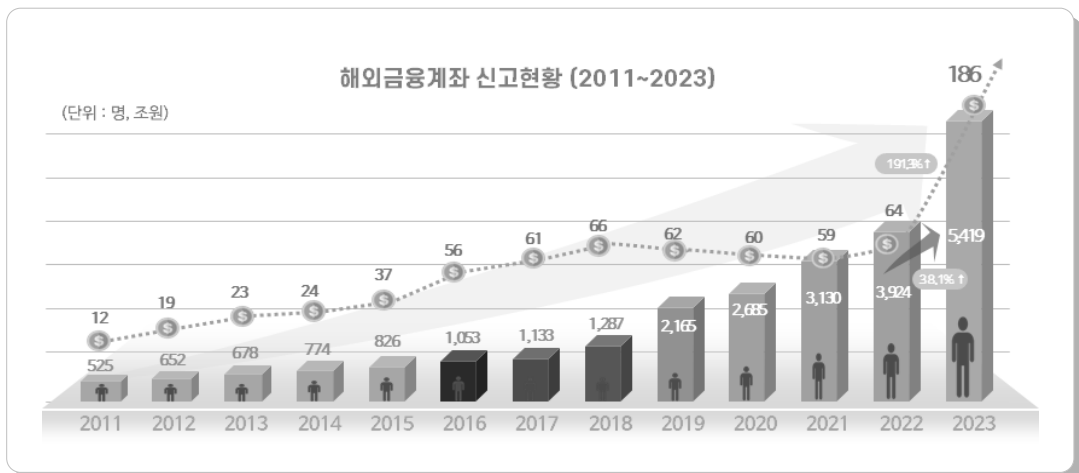
1. 결과 개요

- 올해 해외금융계좌 전체 신고인원은 총 5,419명, 신고금액은 186.4조 원으로 지난해 신고인원 3,924명, 신고금액 64조 원 대비 신고인원은 1,495명(전년대비 38.1%) 증가하였고, 신고금액도 122.4조 원(전년대비 191.3%)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 올해 신고실적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시행된 2011년 이래 신고인원과 신고금액 모두 역대 가장 큰 규모입니다. 또한 이는 시행 첫해인 2011년 525명이 11.5조 원을 신고한 것과 비교해보면 신고인원은 932%(4,894명), 신고금액은 1,521%(174.9조 원) 증가한 수치입니다.
- 올해 신고인원과 신고금액이 최대 실적을 기록한 이유는 해외 가상자산계좌가 최초로 신고 대상에 포함된 제도개선 효과와 함께 해외금융계좌 성실신고 문화가 정착된 결과로 파악됩니다.

【 '23년 해외금융계좌 신고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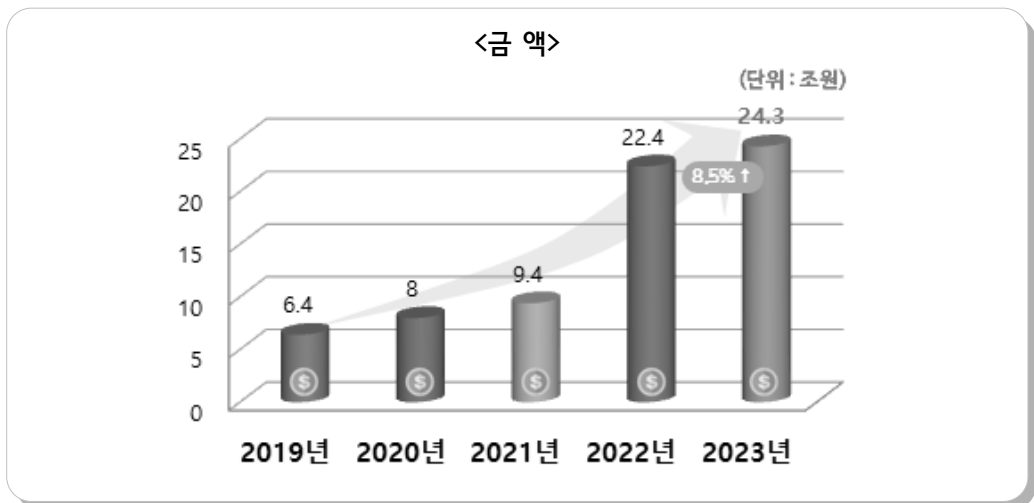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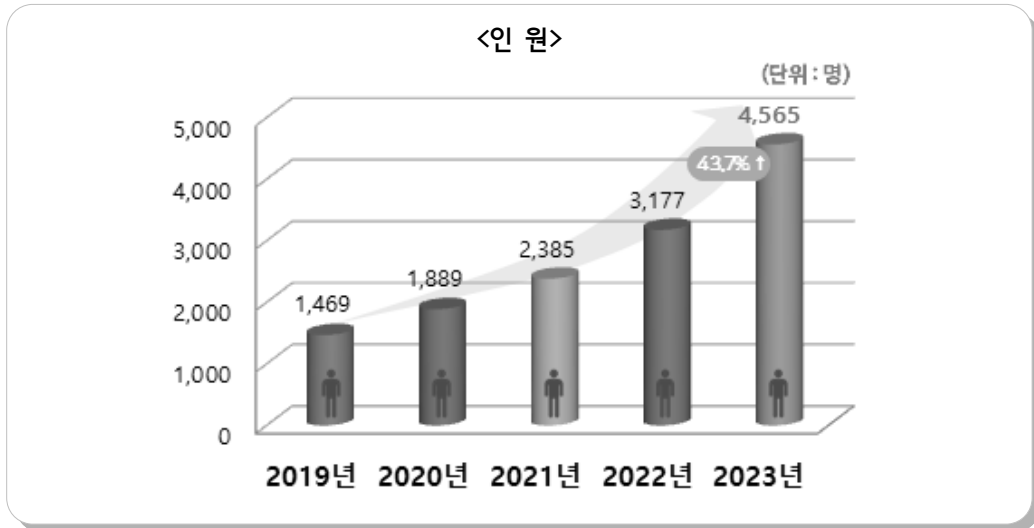
(명, 개, 조 원)

구 분	'23년						'22년		
	인원(증가율)		계좌(증가율)		금액(증가율)		인원	계좌	금액
전 체	5,419	(38.1%)	26,488	(26.7%)	186.4	(191.3%)	3,924	20,909	64.0
개인	4,565	(43.7%)	14,590	(46.6%)	24.3	(8.5%)	3,177	9,952	22.4
법인	854	(14.3%)	11,898	(8.6%)	162.1	(289.7%)	747	10,957	41.6



- 개인신고자는 4,565명이 24.3조 원을 신고하여 지난해 신고인원 3,177명, 신고금액 22.4조 원 대비 신고인원은 1,388명(전년대비 43.7%) 증가하였고, 신고금액은 1.9조 원(전년대비 8.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됩니다.

【 최근 5년간 개인신고자 신고 추이 】



- 전체 개인신고자 신고내역 10분위 분석을 보면 「0~10% 그룹」이 전체 신고금액의 73.7%를 보유하고 있고, 1인당 평균 391.4억 원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신고하였습니다.
- － 이는 「90~100% 그룹」이 1인당 평균 5.2억 원의 잔액을 신고한 것과 비교할 때 약 75배 큰 수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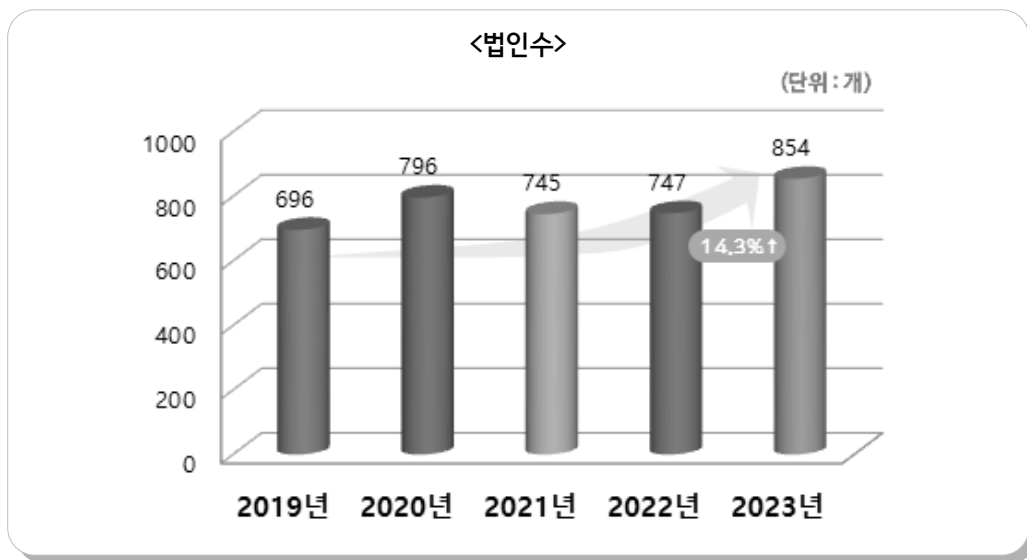
【 '23년 개인신고자 분위별 신고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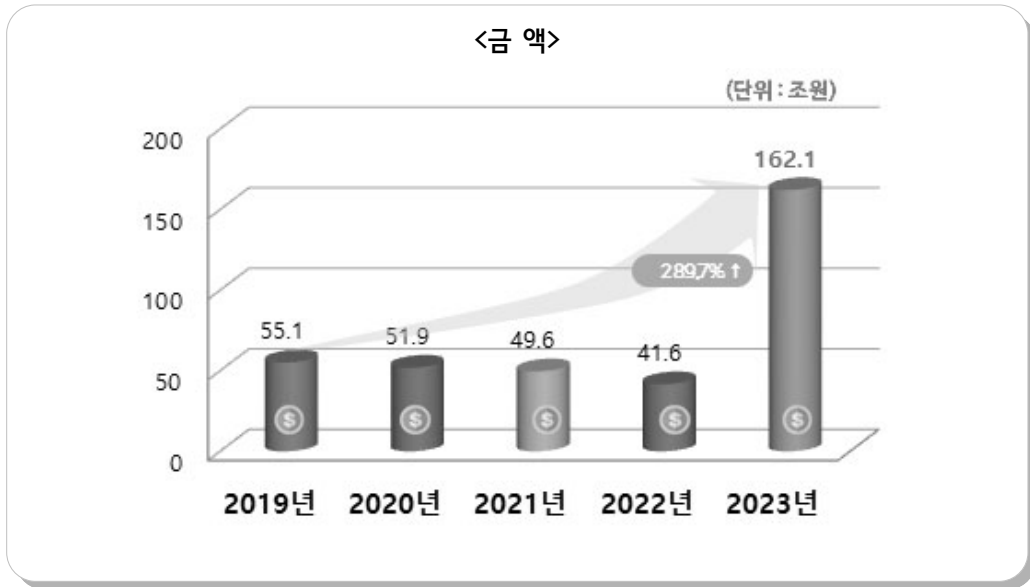
(원, %)

구 분	신고금액	금액 비율	인원	1인당 평균 신고금액
0~10%	17조 8,884억	73.7	457명	391.4억
10~20%	1조 9,223억	7.9	456명	42.2억
20~30%	1조 1,844억	4.9	457명	25.9억
30~40%	8,416억	3.5	456명	18.5억
40~50%	6,404억	2.6	457명	14.0억
50~60%	5,114억	2.1	456명	11.2억
60~70%	4,201억	1.7	457명	9.2억
70~80%	3,479억	1.4	456명	7.6억
80~90%	2,945억	1.2	457명	6.4억
90~100%	2,391억	1.0	456명	5.2억
합 계	24조 2,901억	100.0	4,565명	53.2억

- 법인신고자는 854개 법인이 162.1조 원을 신고하여 지난해 신고인원 747개 법인, 신고금액 41.6조 원과 비교하여 신고인원은 107개 법인(전년대비 14.3%) 증가하였고, 신고금액은 120.5조 원(전년대비 289.7%)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 최근 5년간 법인신고자 신고 추이 】





- 전체 법인신고자 신고내역 10분위 분석을 보면 「0~10% 그룹」이 전체 신고금액의 96.3%를 보유하고 있고, 1개당 평균 1조 8,372억 원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신고하였습니다.
- 이는 「90~100% 그룹」이 1개당 평균 5.7억 원의 잔액을 신고한 것과 비교할 때 약 3,223배 큰 수준입니다.

【 '23년 법인신고자 분위별 신고현황 】

(원, %)

구 분	신고금액	금액 비율	인원	1개당 평균 신고금액
0~10%	156조 1,661억	96.3	85개	1조 8,372억
10~20%	3조 1,888억	2.0	86개	370.8억
20~30%	1조 1,609억	0.7	85개	136.6억
30~40%	6,133억	0.4	86개	71.3억
40~50%	3,506억	0.2	85개	41.2억
50~60%	2,300억	0.1	85개	27.1억
60~70%	1,551억	0.1	86개	18.0억
70~80%	1,033억	0.1	85개	12.2억
80~90%	749억	0.1	86개	8.7억
90~100%	483억	0.0	85개	5.7억
합 계	162조 913억	100.0	854개	1,898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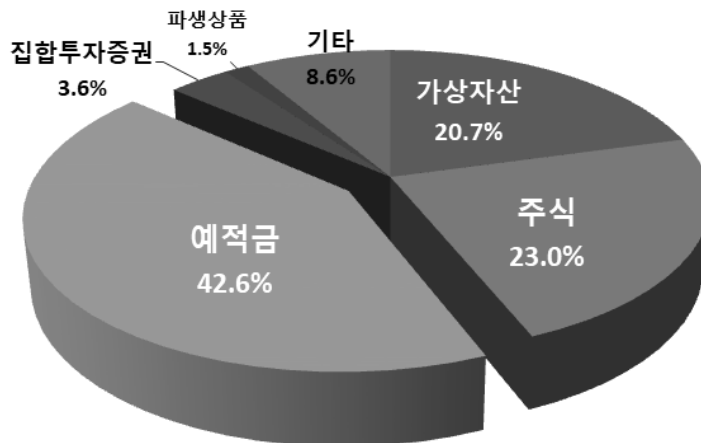


2. 신고자산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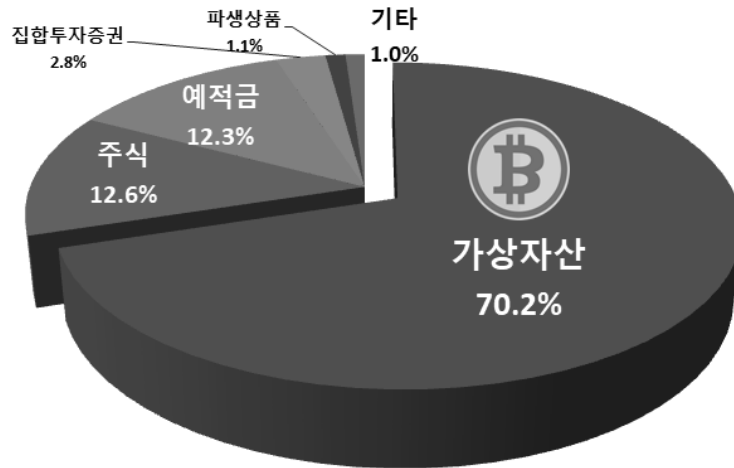
- ('23년 신고 결과) 가장 많이 신고된 「상위 3개 해외금융계좌 유형」은 신고인원(총 5,419명) 기준으로 ① 예·적금(2,942명), ② 주식(1,590명), ③ 가상자산(1,432명), 신고금액(총 186.4조 원) 기준으로 ① 가상자산(130.8조 원), ② 주식(23.4조 원), ③ 예·적금(22.9조 원)으로 나타납니다.
- 올해부터 신고대상에 포함된 가상자산계좌에 대하여 개인·법인 신고자 1,432명이 130.8조 원을 신고하면서 전체 신고자산 중 가장 큰 금액(전체 신고금액 대비 70.2%)을 차지하였습니다.
 - 법인신고자는 73개 법인이 120.4조 원(법인 전체 신고금액 대비 74.3%)을 신고하였는데 코인 발행사인 법인신고자들이 자체 발행한 코인 중 유보물량을 해외 지갑에 보유하던 중 올해 최초 신고한 것 등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 '23년 신고자산별 신고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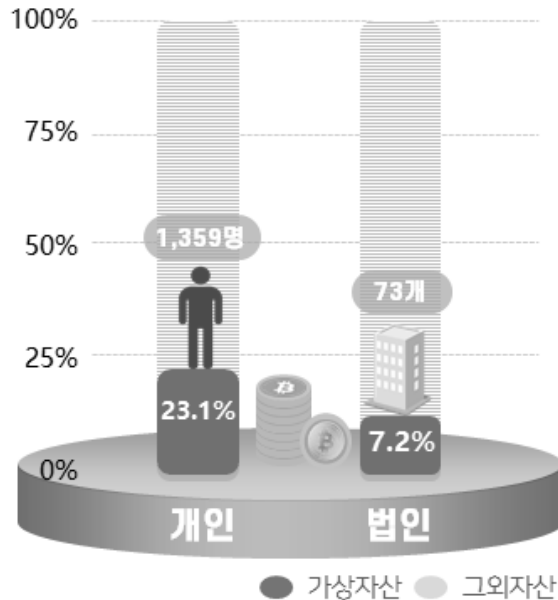
<인 원: 총 5,419명>



<금 액: 총 186.4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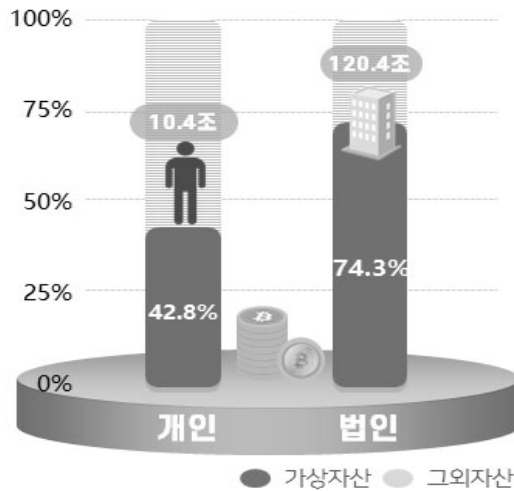


<개인·법인별 가상자산 신고인원 비중>





<개인·법인별 가상자산 신고금액 비중>



- 예·적금계좌 등 가상자산계좌를 제외한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의 경우 신고금액이 큰 폭 (8.4조 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예·적금,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계좌 신고금액은 모두 소폭 상승하였지만, 주식계좌 신고금액이 11.6조 원 감소(전년대비 33.1%)하였기 때문입니다.
- 이는 '22년 해외주식 시장 불황에 따른 보유주식 평가액 하락 등으로 주식계좌 신고금액이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 '22~'23년 전체 신고자의 신고자산별 현황 】

(명, 개, 조 원)

연 도	구 분	전체 (순인원)	가상 자산	가상자산 외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					
				예·적금	주식	집합 투자증권	파생 상품	기타	
'23	신고 인원	전체	5,419	1,432	2,942	1,590	251	100	593
		개인	4,565	1,359	2,192	1,510	225	66	541
		법인	854	73	750	80	26	34	52
	신고 금액	전체	186.4	130.8	22.9	23.4	5.2	2.1	2.0
		개인	24.3	10.4	5.0	5.2	1.4	0.8	1.5
		법인	162.1	120.4	17.9	18.2	3.8	1.4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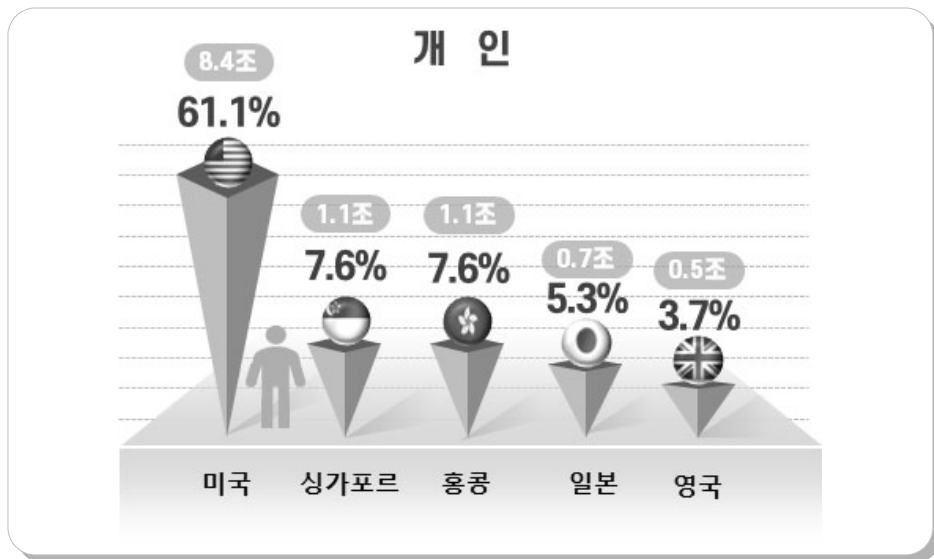
'22	신고 인원	전체	3,924	-	2,489	1,692	208	81	512
		개인	3,177	-	1,801	1,621	185	53	469
		법인	747	-	688	71	23	28	43
	신고 금액	전체	64.0	-	22.3	35.0	3.5	1.4	1.8
		개인	22.4	-	4.3	15.8	0.5	0.2	1.6
		법인	41.6	-	18.0	19.1	3.1	1.2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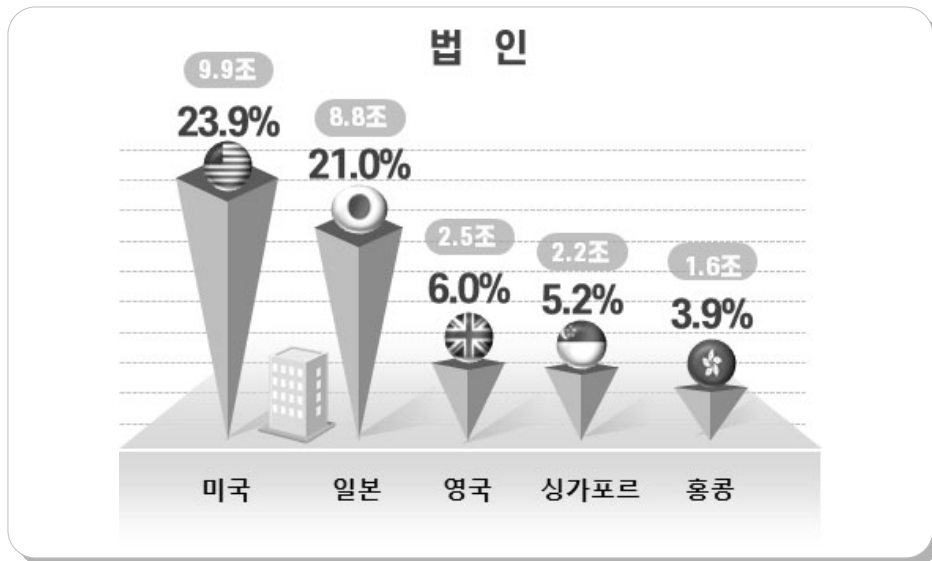
3. 신고자산의 국가별 분포 분석

□ ('23년 신고 결과) 해외 가상자산계좌를 제외*한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은 개인신고자, 법인 신고자 모두 미국 계좌에 보유한 신고금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 해외 가상자산계좌의 경우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의 소재지를 알면 소재지 주소를 기재하나 모르면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의 웹사이트 주소를 기재하여 국가별 분포 분석 어려움

【 신고자산 보유 상위 5개국 신고금액 】





- 자산별 신고금액을 보면 예·적금, 주식, 집합투자증권은 미국 계좌에 보유한 신고금액이 가장 크나, 파생상품의 경우 영국 계좌에 보유한 것으로 신고된 금액이 가장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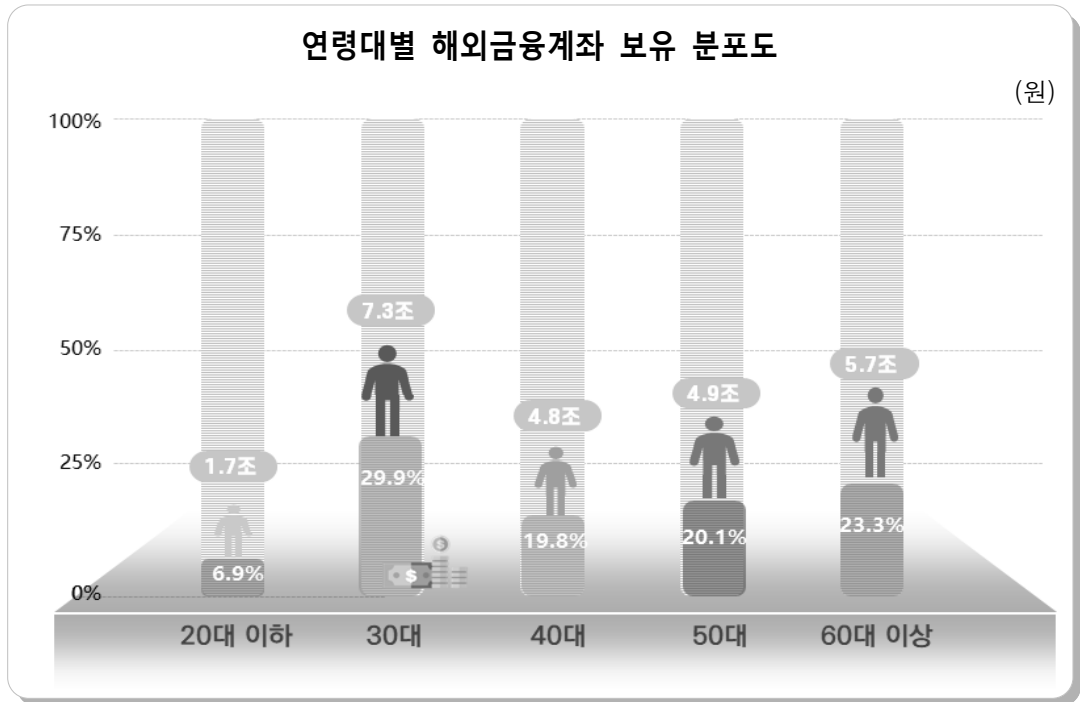
4. 신고내용 연령대별 분석

- (전체자산)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한 전체 개인신고자의 연령대별 보유현황을 보면 신고인원 비율은 ① 50대(26.8%), ② 40대(26.2%), ③ 60대 이상(25.6%) 순으로 높았습니다.
- 신고금액 비율은 ① 30대(29.9%), ② 60대 이상(23.3%), ③ 50대(20.1%) 순으로 높았습니다.
- 1인당 평균 신고금액은 ① 30대(94.6억 원), ② 20대 이하(79.9억 원), ③ 60대 이상(48.4억 원) 순으로 높았습니다.

【 '23년 연령대별 전체 신고자 신고현황 】

(원, %)

구분	신고인원	인원 비율	신고금액	금액 비율	1인당 평균 신고금액
20대 이하	210명	4.6	1조 6,784억	6.9	79.9억
30대	768명	16.8	7조 2,632억	29.9	94.6억
40대	1,196명	26.2	4조 8,082억	19.8	40.2억
50대	1,221명	26.8	4조 8,818억	20.1	40.0억
60대 이상	1,170명	25.6	5조 6,585억	23.3	48.4억
합 계	4,565명	100.0	24조 2,901억	100.0	53.2억



- (가상자산) 해외 가상자산계좌를 신고한 개인신고자의 연령대별 보유현황을 보면 신고인원 비율로는 ① 30대(40.2%), ② 40대(30.2%), ③ 50대(14.1%) 순으로 높았습니다.
- 신고금액 비율은 ① 30대(64.9%), ② 20대 이하(14.7%), ③ 40대(12.7%) 순으로 높았습니다.
 - 1인당 평균 신고금액은 ① 30대(123.8억 원), ② 20대 이하(97.7억 원), ③ 50대(35.1억 원) 순으로 높았습니다.

【 '23년 연령대별 가상자산 신고자 신고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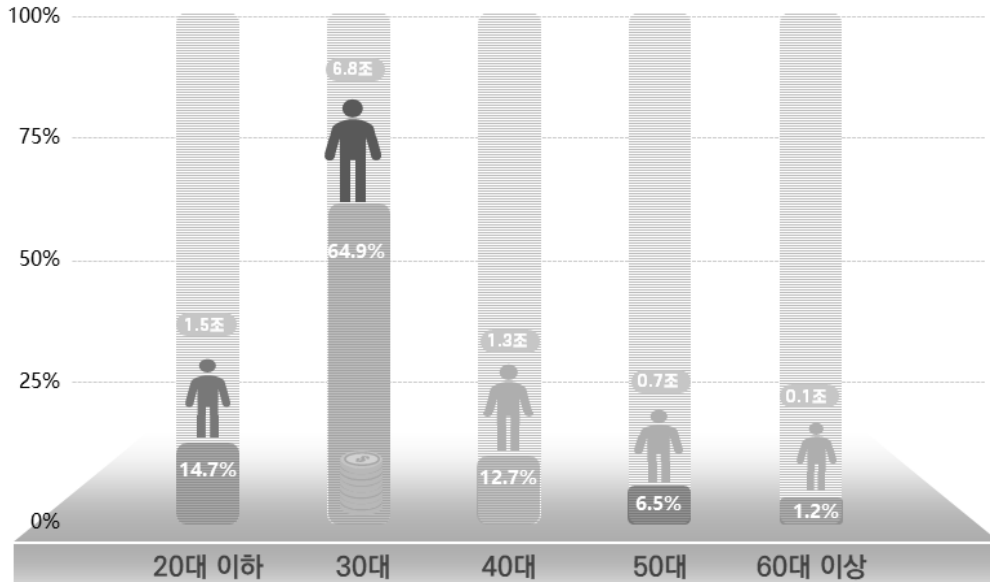
(원, %)

구분	인원	인원 비율	신고금액	금액 비율	1인당 평균 신고금액
20대 이하	157명	11.6	1조 5,343억	14.7	97.7억
30대	546명	40.2	6조 7,593억	64.9	123.8억
40대	411명	30.2	1조 3,180억	12.7	32.1억
50대	192명	14.1	6,738억	6.5	35.1억
60대 이상	53명	3.9	1,296억	1.2	24.4억
합 계	1,359명	100.0	10조 4,150억	100.0	76.6억



연령대별 해외 가상자산계좌 보유 분포도

(단위 : 원)



II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신고검증과 세무조사를 통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를 확인하여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명단공개 등 제재를 엄정히 집행하고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신고기한 내에 신고대상 계좌를 미신고한 경우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 금액의 출처를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라면 해당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추가 부과됩니다.
 - － 국세청은 '22년 12월 말까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637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2,157억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 연도별 과태료 부과 현황 】

(명, 억 원)

구 분	합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인 원	637	20	35	43	40	24	47	53	62	40	68	113	92
부과액	2,157	11	15	116	321	44	106	120	213	55	474	446	236

- (범칙처분 및 명단공개) 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한 경우 범칙처분 즉, 통고처분* 또는 수사기관 고발을 통한 형사처벌**을 받거나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 13%~20% 벌금 상당액 부과 (조세범처벌절차법 §15, 조세범처벌법 §16)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3%~20% 벌금 (조세범처벌법 §16)

- 국세청은 '22년 12월 말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혐의로 93명을 범칙처분(통고처분 및 고발)하고 7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였습니다.

【 연도별 고액 미신고자 범칙처분·명단공개 현황 】

(명)

구분	합계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범칙처분	93	-	-	1	7	18	12	11	14	18	12
명단공개	7	-	1	1	2	1	1	1	-	-	-

III 해외금융계좌 수정·기한 후 신고 안내

- 금번 신고기한('23.6.30.) 이후에도 해외금융계좌 미(과소)신고에 대해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으며 미(과소)신고 계좌를 자진하여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신고 시점에 따라 미(과소)신고 금액의 90%까지 과태료가 감경되며,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자

- 다만,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감경을 받지 못하므로, 자발적으로 수정·기한 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기한 후·수정신고 시 과태료 감경률 】

기한 후 신고한 날	수정신고한 날	감경비율
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90%
신고기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신고기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70%
신고기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신고기한 후 1년 초과 2년 이내	50%
신고기한 후 1년 초과 2년 이내	신고기한 후 2년 초과 4년 이내	30%

IV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제보 및 포상제도 안내

- (제보 방법) 해외금융계좌 관련 제보는 국세상담센터(☎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hometax.go.kr)의 탈세제보 메뉴*를 이용하거나 방문·전화·우편 접수를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경로)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탈세제보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제보

- (제보 포상금)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보하는 경우 최고 2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해외금융계좌 제보 포상금 】

과태료 또는 벌금액	포상금 지급률
2천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	100분의 15
2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3천만 원 + 2억 원 초과 금액 × 100분의 10
5억 원 초과	6천만 원 + 5억 원 초과 금액 × 100분의 5

V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관리계획

- 국세청은 올해 말까지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 외환 자료, 유관 기관 통보자료 등을 종합하여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를 철저히 검증하여 과태료 부과, 범칙처분, 명단공개 및 관련 세금 추징 등을 엄정히 집행할 예정입니다.

- 특히, 가상자산을 통한 잠재적인 세원 잠식 위험성에 대응하기 위해 국세청을 포함한 전 세계 과세당국이 도입을 추진 중인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정보교환 보고 규정(CARF*)에 따라 정보교환을 준비 중이니 신고대상자는 해외 가상자산계좌도 성실히 신고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 암호화 자산 보고 규정(Crypto Asset Reporting Framework)

붙임 1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개요

- 신고의무자 및 면제자

- (신고의무자)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둘 다 신고의무가 있고, 공동명의계좌인

경우 공동명의자 모두가 신고의무가 있음

- (신고면제자) 단기체류 외국인1) 및 재외국민2), 공공기관, 금융기관 및 집합투자기구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기관
 - 1) 최근 10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
 - 2) 최근 1년 중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경우

□ 신고대상

- (신고대상 계좌) 해외금융회사등과 금융거래(은행업무, 증권거래, 파생상품 거래 등) 및 가상자산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 (신고대상 자산) 예금, 적금, 주식, 파생상품,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 가상자산* 등 해외 금융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
 - * 가상자산은 '22.1.1. 이후 신고의무 발생하는 경우부터 신고('23.6월 최초 신고)
- (신고대상 정보) 보유자의 성명·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 해외금융계좌 관련자에 관한 정보
 - * 계좌번호, 해외금융회사등의 이름,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 잔액의 최고금액 등

□ 미·과소 신고자에 대한 제재

- (과 태 료) 미·과소 신고금액의 20% 이하 과태료(20억 원 한도), 신고의무 위반금액 출처 미·거짓 소명 시 20% 과태료
 - * 조세법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거나 조세법 처벌절차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통고 처분을 받고 그 통고대로 이행한 경우에는 과태료 미부과(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90④)
- (명단공개) 미·과소 신고금액 50억 원 초과 시, 인적사항 등 공개
- (벌칙처분) 미·과소 신고금액 50억 원 초과 시, 통고처분이나 2년 이하 징역 또는 위반금액의 13% 이상 20% 이하 벌금(병과 가능)

붙임 2 -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제도

□ 제도 개요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적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 지급요건 및 지급액

- 신고포상금 지급이 가능한 '중요한 자료'의 의미
 - 해외금융계좌정보(계좌번호·잔액, 계좌주 성명 등)를 제공*함으로써 과태료 부과 또는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
 - * 예) 해외금융계좌 사본, 해외금융기관이 발행한 잔액증명서 등



- 포상금 지급액: 과태료 금액 또는 벌금액에 5~15%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20억 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

과태료 또는 벌금액	포상금 지급률
2천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	100분의 15
2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3천만 원 + 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5억 원 초과	6천만 원 +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 탈세제보 포상금(40억 원 한도),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20억 원 한도)의 각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제보자에게 최대 80억 원까지 지급 가능

** 과태료 금액(벌금액)이 납부되고 이의제기기간 도과 또는 불복청구 종료 후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경우 재판에 의하여 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지급

□ 제보 방법 및 비밀 보장

- 국세청 홈택스*, 전화,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제보가능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탈세제보」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제보」

-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 내용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음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5항)

체납세액 정리 강화로 지자체 건전재정 확립 도모

- 행정안전부, 2023. 9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9월부터 12월까지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점검에 나선다.
 - ※ 전국 지방자치단체 대상 징수활동 점검 및 부진단체 현장컨설팅 병행
 - 이번 징수활동 점검은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지방세입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공정과세 기반을 확립하고, 자치단체의 징수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 주요 점검내용은 체납액 정리실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이행 현황, 특화·우수사례 시행 여부 등이다.

- 행정안전부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체납액 합산 기준을 2022년부터 광역 단위에서 전국 단위로 확대하여 1천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 공개(11월) 및 체납자 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11월, 수시), 3천만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6월, 12월) 등 행정제재를 더욱 폭넓게 시행한다.
 -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10,330명, '22.11월),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18,319건, '22년) 출국금지 요청(687명, '23.6월)
 - 아울러, 체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가상자산 체납처분 절차*를 마련하여 가상자산을 통한 신종 탈루에도 적극 대처한다.
 - * 가상자산의 압류 및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한 직접매각 절차 등(지방세징수법 시행령 개정('22.6월))
 - 외국인 체납자에 대해 보다 촘촘하게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출입국기록과 거소지 변경 정보 연계(행안부·법무부) 강화*를 추진하고,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압류 등 체납징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전파하고 있다.
 - * 출입국기록 : 매년 8월→매월, 거소 변경 정보 : 월1회→상시(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23.3월)).

- 각 지자체에서는 지자체별로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와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체납 사각지대를 발굴·해소하여 탈세와 체납근절에



앞장선다.

- 재산은닉, 차명사업장, 위장이혼 등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강화한다.
- 세무조사 중 은닉재산을 발견하거나 지방세를 포탈한 혐의를 발견하면 지체없이 범칙사건조사로 전환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올해 5월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하여 지방세 세무조사 및 범칙사건조사에 관한 훈령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해당 훈령에는 세무조사 중 범칙사건조사로 전환하는 요건·절차 등을 규정하는 한편, 광역·기초간 합동조사 실시, 자치단체 기획조사 활성화 등 자치단체 간 협업을 강화하여 훈령 시행 후에는 일선 자치단체 지방세 체납 및 조사행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이러한 체납징수 활동은 사회적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한 세정 지원 활동과 함께 추진된다.

- 행정안전부는 체납자 실태조사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여 자치단체 세무공무원이 현장조사 등을 통해 발굴한 생계형 체납자 등 취약계층을 사회복지서비스와 연계**하는 등 위기가구 발굴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개정('23.3.)

** 생계형 체납자 복지부서 연계 611건(~'23.7.)

- 또한, 법인지방소득세를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내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하여 기존의 일시 납부에 따른 유동성 악화 등 영세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 지방세법 입법예고('23.8.)

□ 행정안전부는 점검 결과가 우수한 자치단체는 연말에 개최 예정인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선정 시 인센티브 부여 등 기관 차원의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각 자치단체의 엄정 대응 원칙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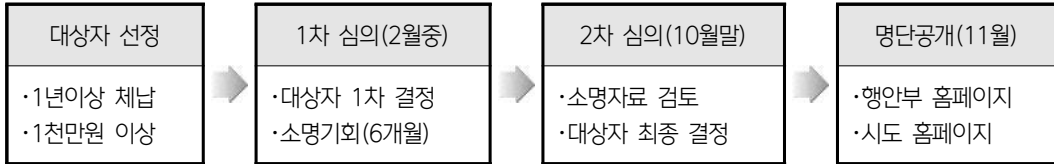
- 덧붙여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자치단체의 체납징수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한편,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세정지원 등의 보호대책 강화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고액·상습체납자 행정제재 개요

□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 (공개대상) 1년 경과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 * 인 경우, 성명, 상호(법인명), 직업, 나이, 주소(영업소), 체납세목 등을 공개
- * 3천만원을 1천만원으로 개정('15.5.18.). 1천~3천만원 범위 내 조례로 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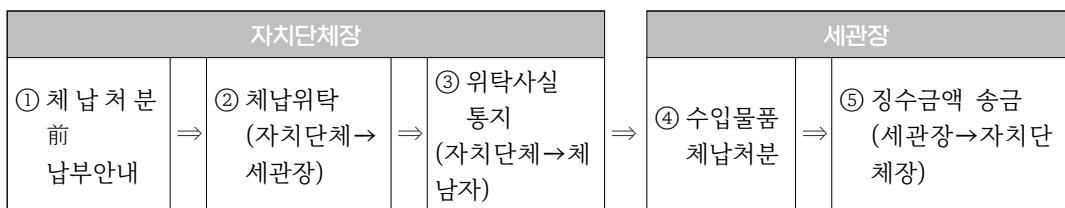


- (공개방법) 관보·공보, 행안부·지자체의 홈페이지, 위택스에 게시
- 공개제외 대상(「지방세징수법」 제11조1항, 같은법시행령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
 -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하거나,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 중인 경우
 - 체납액이 징수유예중이거나 회생계획일정에 따라 납부 중인 경우
 - 지방세심의위가 공개실익이 없거나 공개가 부적절하다고 인정할 경우

□ 고액·상습체납자 수입품 등 체납처분 관세청 위탁

- 자치단체와 관세청이 협력을 통해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21. 1. 1.부터 시행**
- * 관련 법령: 지방세징수법 §39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45의2, 관세법 §237
- ** 법 시행 후 1년 경과 체납분에 적용되어 '22년 하반기부터 실무적으로 운영
- 자치단체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입국 시 휴대품 등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하여 체납액 징수
- * ① 입국시 휴대품, ② 특송품(해외에서 직접 구입하는 물품), ③ 일반 수입품 등

< 관세청 위탁 업무흐름도 >



□ 고액·상습체납자 감치

-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법원 결정에 따라 30일 이내 유치장 등에 구인(拘引)
- * 관련 법령: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4, 시행령 제19조의2 ('22.7.28시행)

※ 도입사례 : 국세징수법(제115조), 관세법(제116조의4),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4조), 민사집행법(제68조), 가사소송법(제67조) 등

- 대상



- ① 지방세를 3회이상 체납, 체납 1년 경과, 체납액 합계 5천만원 이상
- ②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
- ③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로 감치 필요성 인정

○ 감치 절차운영



- 감치 신청전에 체납자에게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 기회부여
- 감치에 처한 체납자는 동일한 체납사실로 다시 감치되지 않음
- 감치 집행 중 체납액을 납부한 경우 감치 집행 종료

□ 전국합산 체납액 기준 출국금지 요청

- 체납액 3,000만원 이상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국금지 사유가 있는 경우 6개월 범위 내에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
 - * 관련 법령: 지방세징수법 제8조
- '23년부터 고의적·악의적 체납 대응을 위해 전 자치단체 및 행안부 합동 전국합산 출국금지 추진
 - * 관련 법령: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2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금융위원회 의결 · 시행

- 금융감독원, 2023. 9

- √ (지정사유 적용 합리화) 재무기준 지정사유가 연속 발생하더라도 지정이 지나치게 장기화되지 않도록 최소 자유선임 계약기간을 보장합니다.
 - 아울러, 지정대상 여부는 해당기업 본연의 사업성과에 근거해 판단할 수 있도록 연결이 아닌, 별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 √ (지정감사인 산업전문성) 지정감사팀 내 산업전문인력을 두도록 해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되어 감사부담이 완화됩니다.
- √ (지정점수 산정 합리화) 감사인 지정점수 산정시 과도하게 반영된 경력기간 가중치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합니다.

‘23.9.13(수) 개최된 제16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이 의결되었다. 개정안은 지난 6.12일에 발표된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감사인을 지정받는 기업들의 감사부담을 합리화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 기업들의 지정감사부담 완화를 위해 상장사 대부분(약 76%, ‘22년)의 감사인 지정이 이루어지는 10월부터 개정규정이 적용되도록 관련 외감규정 개정을 우선 추진

1. 재무기준 직권지정 사유* 적용 합리화

* ❶3년연속 영업손실 또는 ❷3년연속 부(-)의 영업현금흐름 또는 ❸3년연속 이자보상배율 1미만에 해당할 경우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

※ ‘재무기준 직권지정사유’는 폐지(외부감사법 개정사항)할 계획이지만 법 개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규정 개정으로 가능한 사항은 先 조치*

* 개정규정이 ‘24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인 지정 시부터 즉시 적용될 수 있도록 부칙 마련

① 재무기준 직권지정사유 연속발생 부담 완화



그간 상장회사 등은 직권지정기간(3년) 중에 다른 직권지정사유가 발생하면 지정기간(3년)이 새롭게 시작되었다. 그러나 직권지정사유 중 재무기준 미달 사유는 사유 간 연관성이 크고, 쉽게 해소되기 어려워 직권지정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과도하게 지정이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여 앞으로는 재무기준 사유로 직권지정된 회사는 지정기간 중 동일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최소 자유선임 계약기간(예: 3년)을 보장*받게 된다.

* 후행 지정처분 여부는 선행 지정기간이 종료된 다음 사업연도부터 3년간 재무수치를 기준으로 판단

※ (예시) 지정사유가 추가된 상장회사의 지정기간 비교(현행/개선안)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재무기준A			재무기준B			
(현행)	총 지정감사 6년 (A사유('23~'25년) + B사유('26~'28년))						
(개선)	지정감사 기간 3년				자유선임기간 3년		

② 재무기준 직권지정사유 판단기준 합리화

현재는 외감법령상 재무기준 직권지정 대상 여부는 주 재무제표인 연결재무제표상 재무수치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연결재무제표 기준은 지배기업 본연의 사업성과를 지정 여부 판단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존재한다. 이를 개선하여 앞으로는 재무기준 직권지정 대상은 “별도재무제표” 상 재무수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중요도가 낮은 종속기업의 일시적인 경영상황 악화에도 지배기업이 직권지정

2.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 확보 유도

자유선임 시에는 해당 기업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인력으로 감사팀을 구성하지만, 지정 감사시에는 자유선임시에 비하여 감사팀 내 해당 산업 등에 경험이 풍부한 인력이 미흡하게 구성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로 인해, 지정감사인이 기업과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아 과도한 자료 요구 등 감사대응 실무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 개정에서는 감사팀 내에 산업전문인력*이 없는 경우 지정제외점수 40점을 부과하는 등 감사팀 내에 산업전문인력을 최소 1명 이상 갖추도록 하였다.

* 구체적인 사항은 외감규정 시행세칙(금감원)으로 규정 예정 →

예) 최근 10년 이내 관련 산업 내 기업에 감사·비감사용역 제공한 자, 최근 3년 이내 관련 산업협회 등에서 주관하는 산업교육을 일정시간 이상 이수한 자 등

3. 감사인 지정점수 산정방식 개선

그간 감사인 지정점수 산정방식*은 회계법인에 경력기간이 긴 회계사가 많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로 인해 회계사의 연차가 높을수록 많은 기업이 배정되는 경향

이 있었다. 이번 개정에서는 고연차 회계사의 지정점수를 직장인의 정년퇴직시기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였다.

* 기본점수 = 등록회계사수(회계사 경력에 따라 점수 차등) + 0.5 x 수습회계사수

< 경력기간별 공인회계사 점수 >

구분	2년 이상	6년 이상	10년 이상	15년 이상	20년 이상	30년 이상	40년 이상(신설)
현행	100	110	115	120	120	120	120
개정	100	105	110	115	120	110	100

4. 지배·종속기업 감사인 지정방식 개선

현재는 지배·종속기업 중 일부만 감사인 지정을 받은 경우 감사인 일치를 위해 기업이 감사인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사전통지시에는 다른 감사인이 지정되는 비효율적인 사례가 상당히 발생하였다.

앞으로는 기업이 지배·종속기업의 지정감사인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사전통지” 부터 동일한 감사인을 지정하게 된다.

본 개정안은 금융위원회에서 의결 후 고시하는 9.14일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 확보와 관련된 사항은 회계법인의 준비시간, 외감규정 시행세칙 개정시일 등을 고려하여 '24.1.1일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참고) 6월 12일 발표된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 진행상황

① △연결 내부회계 도입시기 조정, △감사인 직권지정사유 중 '투자주의환기종목' 사유 폐지, △표준감사시간 심의위 중립성 강화, △중립적 분쟁조정기구 신설 등 시행령 개정사항은 현재 입법예고 진행중 (~9.25.) → 내년부터 시행 추진

√ 중립적 분쟁조정기구 업무절차 등 시행령 위임사항을 포함한 외감규정 개정안은 9월 중 추가로 규정 변경예고 예정

② △신규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부담경감, △감사인 직권지정사유 완화 등의 법률개정 필요 사항은 법률개정안 마련 중

③ 표준감사시간 법적 성격 명확화를 위한 공인회계사회 회칙 및 행동강령 개정은 연내 마무리하여 '24.1월부터 적용 추진

붙임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주요 내용

1. 추진 배경

□ 新외부감사법 시행('18년~)으로 도입된 주요 회계제도에 대한 성과와 한계를 객관적으로 평가해보고, 보완방안 마련(' 23.6.12 발표)



* 금융위, 금감원, 기업·회계업계·학계 등이 참여하는 회계개혁 평가·개선추진단을 구성·운영하였으며, 추진단과 별도로 회계학회 연구용역도 진행

2. 주요 내용

□ 現 회계제도의 기본틀은 유지하면서 비용 대비 투자자 편익이 크지 않은 부분은 현실에 맞게 조정

○ (내부회계관리제도)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의 연결 내부회계 도입을 5년 유예(‘24→’ 29년)하고, 중소기업 신규 상장시 3년간 내부회계 외부감사 면제

*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이미 도입준비가 완료된 점을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현행 유지(‘23년~)하되, 내부 상황에 따라 연결내부회계 도입 유예를 요청한 기업에 한해 예외적으로 2년간 유예 허용

○ (감사인지정제) 회계부정 관련성이 낮고, 경미한 감사절차 위반에 해당하는 직권지정 사유 대폭 정비※

※ 주기적 지정제의 경우 짧은 시행기간(3년)으로 정책효과 분석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데이터 확보시까지 당분간 현행 제도를 유지

○ (표준감사시간*) 가이드라인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화**하고, 심의위원회(3년마다 표준감사시간 심의·조정) 구성·운영의 중립성 강화

* 국제감사기준에 부합하는 적정수준의 감사품질 확보를 위한 평균 감사필요시간

** 그간 ‘법정 최소 감사시간’으로 활용된 측면이 있어 기업측의 어려움 발생